하늘 높고 코스모스 핀 완연한 가을 5일 제주시 오라동 정실마을 인도변에 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가 활짝 펴 완연해진 가을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올 겨울 김장 담글 수는 있으려나…

배추·무·고추 등 김장 재료 가격 폭등세
토마토·쌀 가격도 올라 먹거리 걱정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 등 기상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인상된 물가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일 제주도 농산물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배추 10㎏ 도매가격은 2만6020원으로 전월 대비(2만4335원) 6.0%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33.5% 올랐으며, 평년 대비로는 97.3%나 상승한 수준이다.

이처럼 배추 가격이 오르면서 내달 시작되는 김장철을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0월 배추 출하량은 가을배추 작황 부진 등의 이유로 평년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83%, 평년 대비 108.8%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무 20㎏ 도매가격은 2만7660원으로 전년 대비 32.3% 올랐으며, 붉은 고추는 10㎏당 25만1400원으로 작년보다 243.0%나 상승했다. 깐마늘 도매가도 전년 대비 75.4%, 대파는 67.4% 올랐다.

배추 가격 못지않게 토마토 가격도 크게 올랐다. 토마토 10㎏ 도매가는 5만5020원으로 전년(3만2900원) 대비 67.2% 올랐다.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급등한 토마토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토마토를 뺀 메뉴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밥 족이 늘면서 쌀값도 상승했다. 쌀 20㎏ 도매가격은 5만3120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3.2%, 평년 대비 26.5%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쌀 수요 급증으로 재고량 대부분이 소진되고 기상 악화로 인한 벼 생육 부진에 따른 공급량 감소를 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김현석기자

등교수업 밀집도 강화조치 연장되나

도교육청 "한글날 연휴와 코로나 잠복기 고려"

추석 연휴 기간 제주에 28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등교수업 밀집도 강화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5일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추석 연휴 후 일주일 동안인) 오는 11일까지 1/3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하지만 한글날 연휴에도 많은 인파가 입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의료 및 방역당국, 제주도청 등과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12일 이후 등교수업 방향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5일부터 11일까지 '밀집도 특별 강화 기간'으로 설정, 도내 모든 초·중·고 밀집도를 1/3로 강화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4일 동안 도내 모든 학교에서는 밀집도를 1/3로 줄여 등교수업을 운영한다. 또 도외 방문 학생의 경우는 일정 기간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등을 하도록 했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학교(3개교)도 기존대로 밀집도 조치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게 했다. 유치원의 경우는 7학급 이상은 2/3 밀집도, 6학급 이하는 전체 등교 또는 2/3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초·중·고교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경우는 전체 등교 및 밀집도 2/3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총 58개교(초 48·중 9·고 1)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늦어도 8일까지 각급 학교 의견과 교육부 지침, 제주 코로나19 현황 등을 반영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자 14명 검거

경찰, 업무방해 혐의 등 적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국에서 187명이 검거된 가운데, 제주에선 14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혐의로 제주지역에서 14명의 용의자가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 지역이나 병원·가게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선 코로나19 발생 초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식점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쓰러졌다" 또는 "제주대학교 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이송됐는데 뉴스엔 나오지 않았다" 등의 가짜뉴스가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다혜기자

"세 자녀 이상 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제주도교육청 조례 제정 추진… 내년 1월 목표

제주도교육청이 세 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에게 '1호봉 특별승급'을 시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한 교육감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상의 권한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공무원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을 시킨다. 이어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 받아 선발, 3년의 범위에서 수습근무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 ▷'전산' 직렬을 6급부터 '교육행정직'으로 통합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 ▷지방공무원 1~3급 대상 자질·능력에 대한 심사 실시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1월 제정 목표로, 조례가 제정되면 원활한 인사행정 운영 및 교육 자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작년 제주서 동물 7734마리 버려져

전국 유기동물 분석 결과
동물보호센터는 한곳 뿐

제주지역에서 지난 한 해 유기된 동물이 7000마리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3만5791마리이며, 이 중 제주지역에서는 총 7734마리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제주에는 단 한 곳뿐이었다. 제주에는 농림부가 지원하는 시·군 직영 보호센터가 1개소에 불과하며, 이외에 시설 위탁이나 위탁 보호 시설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총 7508마리가 유기된 서울 지역의 경우 동물보호센터가 총 284군데에 달했다.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수를 보면, 경기 55개소, 전북 27개소, 경북 26개소, 대구 25개소, 전남 23개소, 경남 21개소, 강원 19개소, 충남 18개소, 울산 15개소, 충북 10개소, 인천 7개소, 부산 5개소다.

제주처럼 동물보호센터가 단 한 곳 뿐인 곳은 광주, 대전, 세종 세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 유기동물은 ▷2014년 8만1147마리 ▷2015년 8만2082마리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 10만2593마리 ▷2018년 12만1077마리 ▷2019년 13만5791마리가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집합금지 조치 위반 유흥시설 4곳 적발

도 "고발 등 검토"

추석연휴기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이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 기간(9월 28일~10월 4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적용된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4개 유흥업소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장 확인결과 2곳은 9월 28일 집합금지 조치 시간을 넘기고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소는 간판불을 끄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가게 청소 후 지인과 함께 음주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다른 업소는 서귀포경찰서가 적발한 곳으로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